日 '백색국가'서 韓 제외 예정… 韓美日 안보협력 '흔들'

이르면 이달 말 제외대상국 지정
전략물자 수입때마다 개별심사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 미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사건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즉 이 제도는 안보 분야에서 우방국에 부여하는 혜택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재계는 공동으로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1100개 품목 및 3000개 연계품목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재계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자국 내 국무회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안보전략 핵심이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이번 한일간 외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간 갈등이 더 악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번 사안(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및 우리기업 수출규제 등)은 일본이 정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문제를 끌고 온 첫 번째 사례인 점을 강조했다"며 "그간 한일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었을 때도 경제 분야는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가 이어졌으나 이번엔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했다.

정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 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 행보와 궤를 달리한다"며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은 작년 5월9일 자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와 더불어, 한국군과 일본군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대변인은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한일간 외교 문제가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반응"이라며 "한일간 정보보호협정(GSOMIA)가 그 예다. 일본이 이 협정의 전면 수정도 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고 했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23일 발효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8월 1년 연장이 결정됐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日 수출규제, 다음 타깃은 '자동차·기계'"

대일의존도 높고 영향 큰 산업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성 확대

일본이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 기계까지 수출 제재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감안, 일본이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 대상은 대일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 수출 영향이 큰 산업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증권은 16일 관세청의 지난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산업의 대일 의존도(전체 수입 중 일본 수입 비중)는 자동차 11.8%, 특수목적기계 32.3%, 일반목적기계가 18.7%를 각각 차지했다. 반도체는 8.3%이고 정밀기기는 19.9%였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첫번째 공격 타깃이 중고위~고위기술산업군 중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였다면 다음은 자동차, 기계 등이 우려된다"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선제적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기계 등의 산업들은 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공급사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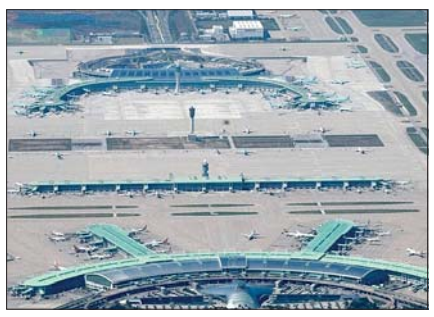
유 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양국 경제 및 산업에 파괴적인 양상까지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한·일 대립은 글로벌 경제 및 아시아 역내 지역 안보에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양측 모두 과거와 다른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사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개연성을 내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달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보험성 금리 인하 시행이 기정사실화된 상황도 한은의 금리 인하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책이 현실화하면 코스피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日 여행, 예약취소 잇따라… 항공사 울상

유류비·환율 상승도 겹쳐 실적 감소
대형·저비용항공사 모두 주가 하락세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으로 가려던 여행객의 예약 취소가 줄을 잇는 가운데 유류비·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항공업계 하반기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750만명으로 6조 4000억원을 썼다. 반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일본인은 295만명으로 2조 6000억원을 썼다.

일본내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 비중은 24%로 중국인(27%)에 이어 2위다. 일본 경제조치에 대해 한국이 일본 여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행수요는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전체 여행상품 중 20~30%가 일본 상품인 여행사의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10일 3일간 일본여행 신규 예약자 수가 평상시의 3분의 1 수준인 40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대형항공사,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특히 일본노선 비중이 대형항공사보다 큰 LCC업계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여행 보이콧에 의한 영향은 현재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제주항공의 주가는 지난 1일 3만 2950원에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12일 2만8700원까지 떨어졌다. 16일에도 전 거래일보다 150원 내린 2만7850원으로 마감됐다.

진에어도 같은 기간 2만1300원에서 1만7500원까지 하락했고 티웨이항공은 6640원에서 6040원으로 내려앉았다.

단거리 노선 의존도가 적은 대형항공사도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대한항공의 경우 매출은 작년 수준을 유지한 3조 1000억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100억원 대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여객부문 실적은 나아졌으나 화물 수요가 감소하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보다 절반이 줄어든 200억원대로 예상된다. 업계는 실적이 악화된 공통적인 원인으로 유류비·환율 상승 등 대외적인 조건이 나빠진데다 여행수요 증가율도 전보다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또한 경쟁심화로 할인경쟁이 벌어지면서 전체적인 수익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여행사의 경우 상품 취소 사례가 증가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일본 여행 수요 감소가 항공업계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에 쓴소리 "기업 필요한 자금공급 위축" 지적

상반기 中企대출 증가 2.3% 불과
신용공급 축소, 경기 변동폭 키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은행권이 여신유의업종 운영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은행권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의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가폭 3.8%에 미치지 못하는 등 조선·자동차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정체 상태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경기가 좋지 않다고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축소한다면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돼 오히려 자산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경제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신용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역경제의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은행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은행에 대하여 건전성 감독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